

2009 남북통합지수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사회학과 교수)

김병연 (통일평화연구소 연구실장, 경제학부 교수)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정은미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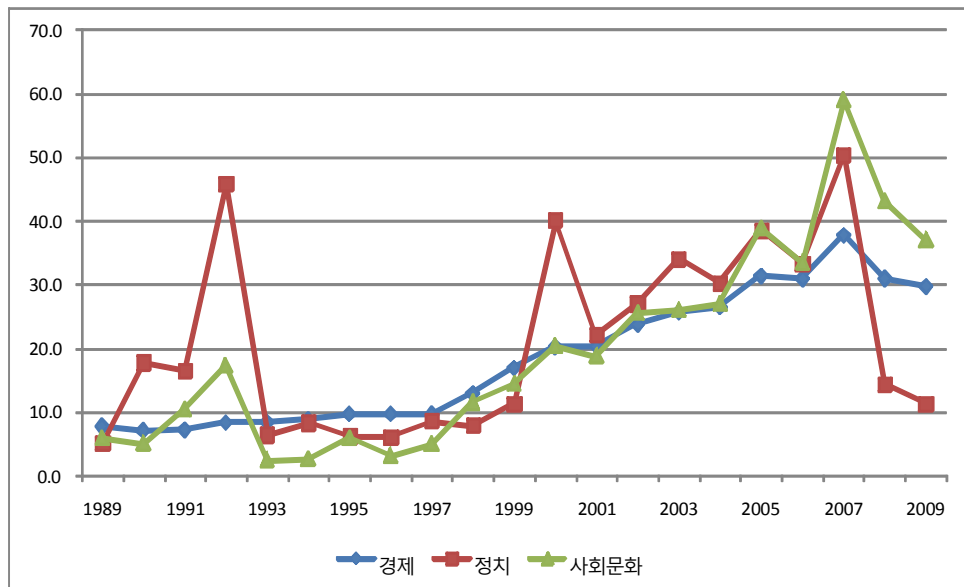
2010. 8. 11

2009 남북통합지수
총괄 및 전망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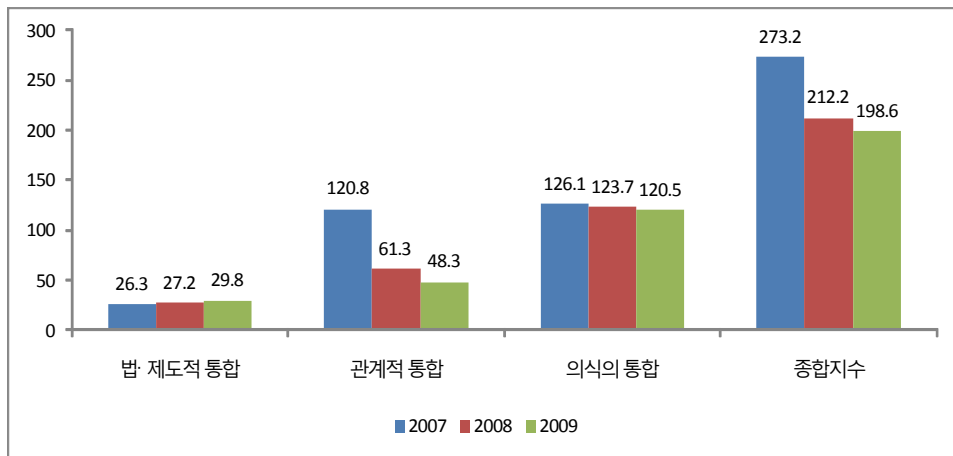
2009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그림 1〉 남북통합지수의 연도별 추이

- 2년 연속 경제, 정치, 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통합지수가 모두 하락함
- 2009년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기준에 198.6임. 2008년 212.2에서 13.6 포인트가 감소함. 2008년에 비해 하락폭은 다소 줄었지만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특히, 2008년까지 3단계를 유지하던 경제 분야와 사회분야의 통합수준은 모두 2단계로 떨어짐. 이는 경제는 2005년 이전의 수준으로, 사회분야는 2007년 이전의 수준으로 남북 통합의 수준이 후퇴했음을 의미함
 - 또한 3단계에서 2단계로의 후퇴는 남북 통합수준이 협력도약기에서 단순 접촉·교류기로 후퇴했음을 의미함
 - 정치 분야의 통합단계는 비록 2008년과 같은 1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1단계의 출발점인 11점에 간신히 턱걸이 할 정도로 통합 정도가 크게 낮아짐

- 2007~2009년 기간 남북한의 통합율은 2년 연속 낮아지고 있으며, 정치 분야의 감소폭이 가장 큼
 - 3년간의 남북 통합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27%→2008년 21%→19.9%로 계속 낮아짐
 - 분야별 통합지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경제 분야의 경우 2007년 82→2008년 72.9→2009년 71.1로 소폭 감소하고 있고, 정치 분야의 경우 91.2→55.3→51.1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100→84→76.4로 감소하고 있음
 - 2009년에도 2008년과 마찬가지로 정치 분야의 통합이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의 하락세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져, 정치통합부문의 악화가 다른 부문의 악화를 견인함



〈그림 2〉 2007~2009 3개년 영역별 지수 및 종합지수 비교

- 법·제도의 통합수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관계적 통합과 의식 통합의 수준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특히, 관계적 통합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법·제도의 통합지수는 2007년 26.3→2008년 27.2→2009년 29.8로 매우 소폭으로 상승하였고, 관계적 통합지수는 120.8→61.3→48.3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의식 통합지수는 126.1→123.7→120.5로 소폭 감소함. 따라서 관계적 통합이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음

- 관계적 통합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큰 이유는 2008년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남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임
- 2년 연속 의식통합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소폭 감소함
- 남북의식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2년 연속 의식통합지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간의 의식통합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남북의식통합지수의 3년간 추이는 2007년 126.1점, 2008년 123.7점, 2009년 120.5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의식 통합은 관계적 통합과 달리 남북관계의 장기적 경색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남북한의 정치적 단절과 관계의 경색이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의식에는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정치적 상황이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북한 주민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 분야에서는 남한주민이 더 민감하게 반응함(<표 1> 참조)
-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북한주민에게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더 크며, 남한주민에게는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표 1〉 분야별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 변화

(단위: 백만불, %)

분야	의식 대상	2008년	2009년
정치 분야	남한주민	17.4	15.7
	북한주민	23.5	23.1
경제 분야	남한주민	14.5	15.5
	북한주민	27.4	25.8
사회문화 분야	남한주민	17.6	17.5
	북한주민	23.3	21.9

2010년 전망 및 제언

- 2010년 남북통합지수의 하락세 여전할 듯, 하지만 2010년 하반기에 바닥점을 치며 다시 상승의 계기가 형성될 수 있음
 - 천안함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6자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남북관계의 대립과 강경한 대북정책의 기조는 2010년에도 지속될 것임
 - 또한 여파로 남북교류협력 활동은 위축되고, 남한의 대북인식은 더 악화되며, 북한은 후계구축 과정에서 체제 내부 결속을 강화할 것이 예상되어 2010년에도 남북통합지수의 하락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남북통합지수의 시계열 변동 추이(<그림 1> 참조)를 토대로 예측하는 바, 2010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될 수 있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남북통합지수의 하락세는 2년을 넘지 않았음. 예를 들어, 1992년에 최고점에 달했다가 1993년에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1994년에 반등하였고, 2000년에도 다시 최고점에 달했다가 2001년에 최저점에 이르렀지만 2002년에 반등의 기회를 잡았듯이, 2007년 최고점에 오른 후 2년 연속 하락세에 있지만 곧 반등의 기회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대화와 교류를 원함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2010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인식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률이 오히려 55.8%에서 59%로 높아졌음
 - 또한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하는 응답률(33.1%)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응징’을 원하는 응답률보다 3배 이상 많았음
 -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률에서 찬성의 응답률(60.1%)이

반대의 응답률(13.1%)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달리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음

- 이러한 통일외식조사에 토대하였을 때, 2010년 하반기에는 유연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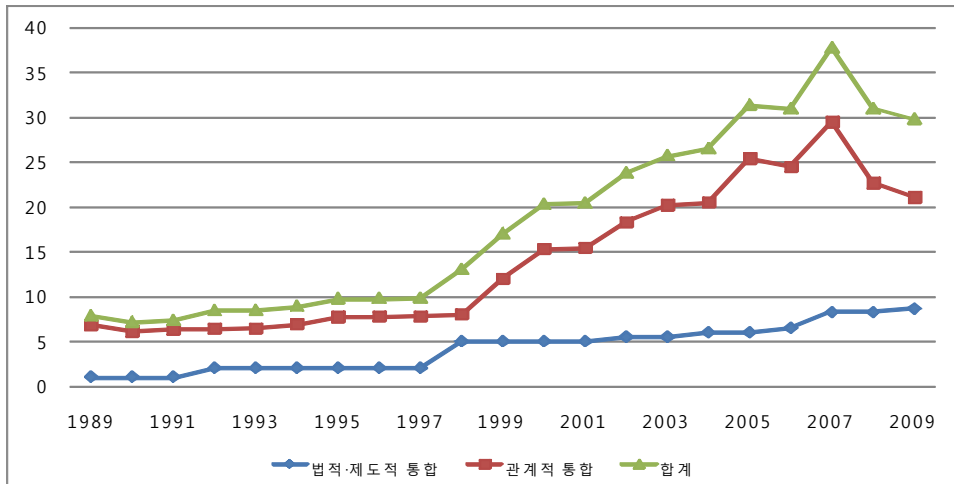
□ 2010년 남북통합 수준을 반등시킬 수 있는 동력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의식 분야 모두에 여전히 남아있음

-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7월 북한당국은 2009년과 달리 황강댐 방류를 미리 우리측에 통보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강경한 5.24대북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조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더욱 극심해진 식량난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한 대북NGO들의 인도적 지원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통일과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음

- 따라서 관건은 남아있는 통합의 동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통합 수준을 다시 높이는가에 달려있으며, 이는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통해 기능할 수 있음. 특히, 2008년, 2009년의 남북통합지수가 시사하듯 정치통합의 악화가 경제 및 사회문화, 의식 통합지수의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치부문의 관계 복원이 절실함.

-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남북통합에서는 정치부문의 탄력성이 매우 높아 이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는 남북 당국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함

영역별 요약 - 경제 영역



〈경제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09년도 경제 영역의 남북통합지수는 2008년의 31.0점에서 2009년에는 29.8점으로 하락하였음. 이에 따라 경제영역의 통합단계는 2005년 이후 유지되었던 3단계의 통합수준에서 2단계로 하락하였음.
 - 2단계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은 단계’를 의미하며, 3단계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를 의미함.

- 2009년 경제 영역 통합지수는 2008년의 큰 폭의 하락(6.8점)이후, 그 하락추세가 지속되는 추이를 보임.

- 2009년 지수가 2008년에 비해 하락폭이 적었던 것은 다음과 같이 하락과 상승요인이 교차하였기 때문임.
 - 상승요인
 - 북한은 대외적 제재환경 속에서도 경제관련 법제정비에 노력을 기울였음

며, 개성공단 세부시행 세칙들이 정비되면서 남북한 법제의 수렴도가 높아졌음. 이에 따라 남북 공동법제화 점수가 0.9점 상승함.

- 남북 교역액은 전년대비 7.8% 감소하였지만, 북한 전체교역액 중 남북교역의 비중이 2008년의 32.3%에서 2009년 33%로 증가하여 교역부문 통합지수가 0.2점 증가함.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2009년 42,561명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함에 따라 노동부문 통합지수가 0.3점 증가하였음.

- 하락요인

- 2009년 말에 시행되었던 ‘화폐개혁’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대해진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에 따라 ‘법제의 실효화 수준 점수’가 0.5점 하락하였음.
- 2009년 정부의 대북투자액이 2008년 1억 4천 7백만 달러에서 61.9% 하락한 5천 6백만 달러에 불과하여 투자부문 통합점수가 1.6점 하락함.
- 북한의 ‘12.1조치’, ‘현대아산 직원 유씨 억류사건’ 등으로 인력이동 및 거주인력의 안전보장 문제가 발생함. 이를 ‘무역자유화 부문’에서의 일정한 후퇴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이 부문 점수가 0.5점 하락하였음.

□ 통합지수로 판단할 때 2009년의 경제 영역의 통합 정도는 2004년 이전으로 후퇴한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2010년에도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교역과 대북 투자가 2009년에 비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나 입주기업의 이탈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과 무역자유화 부문에서 통합지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그 경우 경제 영역 통합지수는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통합단계는 여전히 2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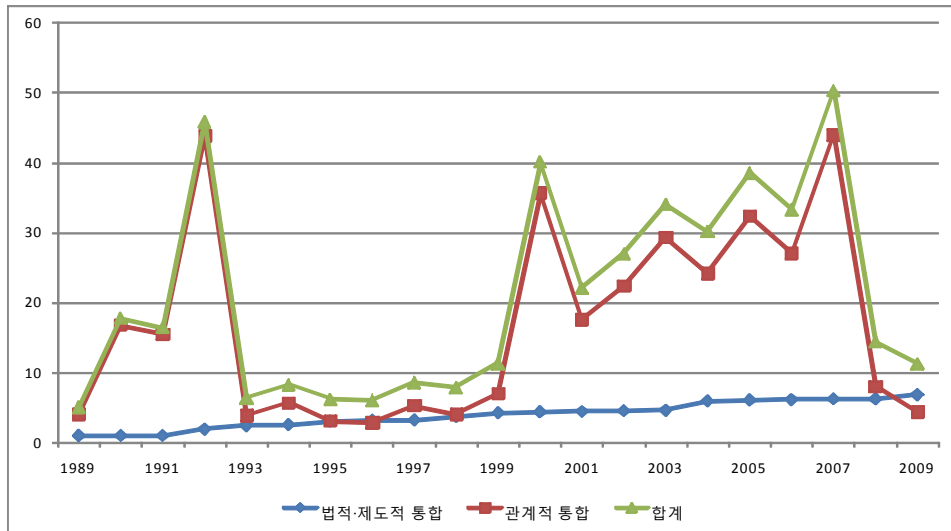
- 따라서 2005년부터 협력도약기로 평가되던 남북경제통합정도는 2008년에는 접촉교류기로 후퇴하는 조짐을 보였고, 2009년과 2010년을 지나며 그 후퇴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경제 영역의 의식통합지수 2007년 44.2점, 2008년 41.9점, 2009년 41.3점으로

비록 적은 차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의식면에서의 통합정도가 약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경제 영역의 통합지수는 정치 분야와 달리 급격하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음. 그러나 여전히 남북 관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경제영역의 지수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남북의 정치적 관계가 경색되면 경제영역에서의 남북통합도 저해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경제 영역의 정치 영역으로부터의 독자성이 아직은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즉 경제 영역의 발전이 정치 영역의 발전을 이끄는 식의 기능주의적 가설이 적용되기에는 현 단계에서의 남북경제통합 정도는 충분한 독자성과 추동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영역별 요약 - 정치 영역



〈정치 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09년도 정치 영역의 남북통합지수(제도·관계통합)는 2008년의 14.4점에서 11.3점으로 감소하였음. 정치영역의 통합단계는 1단계(11~20점)로 통합의 동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임.
- 정치통합지수의 하락 원인은 남북관계의 대립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남북간 정치대화와 회담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임.
 - 2009년 남북간 회담은 정치실무회담 4회, 정치인교류 1회, ARF회동 1회, 공동보도문 1회에 그쳤음.
- 정치통합지수가 하락한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배경이 작동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내부 정치불안정으로 인한 과도한 대외·대남 반응, 제2차 핵실험 및

유엔의 대북제재 지속

- 회담과 대화에 무게를 두지 않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

□ 3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져 1단계에 머물러 있는 2009년 정치통합의 패턴은 3 단계에서 0단계로 추락하여 이후 집권기간 내내 0단계에 머물렀던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시기와 유사함.

- 김영삼 정부에서는 3단계에서 0단계로 추락한 이후 5년 내내 0단계에 머물러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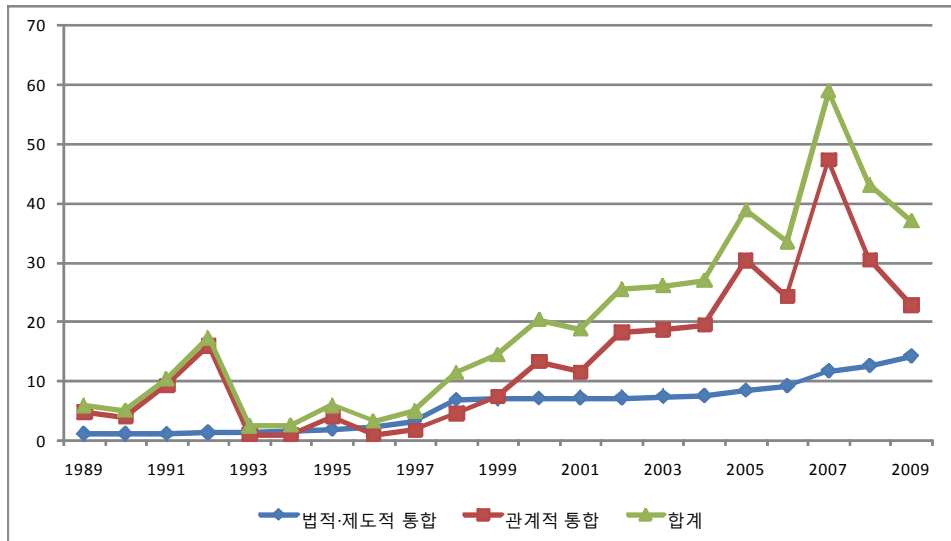
□ 정치 분야 통합지수가 전반적인 남북통합지수의 하락과 상승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정치영역의 견인효과 내지 선행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

- 경제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에서 단계하락은 이전 해의 정치통합 단계하강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정치의식통합은 49.8%로 제도통합(7.7%)이나 관계통합(2.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관계통합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신뢰도는 떨어졌으나, 통일공감대와 호감도는 오히려 더 상승

영역별 요약 - 사회문화 영역



〈사회문화 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09년 사회문화 제도·관계 통합지수 37.0점은 2008년 43.1점에 비해 6.1점이 감소한 것으로 2년 만에 다시 3단계에서 2단계로 떨어짐.
 - 제도적 통합지수 14.2점과 관계적 통합지수 22.8점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2009년 사회문화 통합지수는 37.0점임. 이 수치는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단계(21~40점)에 해당함.
- 2009년의 사회문화 분야 변화부문 지수를 2008년 지수와 비교해 보면 증감률이 다소 줄어들음. 2008년의 증감률은 -16.1이었던 반면에, 2009년의 증감률이 -6.1임
- 지표별로 비교해보면, 공동행사 항목의 상대점수가 가장 큰 폭(-5.3)으로 하락하였고, 다음으로는 인적 이동의 자유화 왕래(-1.1) 순서로 하락하였음

- 2009년에 남북한 공동행사 및 인적 이동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북한의 호전적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하면서 민간영역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들이 대부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중단된 관광이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재개되지 못했기 때문임

□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 단계가 한 단계 하락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인적 왕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임
- 두 번째,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의 억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2차 핵실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남측 인명 피해 등에 대응하여 이명박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함으로써 민간영역의 교류협력활동이 크게 제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 역시 오랫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임
- 세 번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북한의 고위급 조문단 파견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접촉 등으로 잠시 열린 남북관계의 해빙의 기회와 모멘텀(momentum)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임
- 네 번째, 사회문화 영역의 남북교류협력이 민간에 의해 주도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네트워크나 활동성이 확보될 만큼 성장하지 못해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되어 위축되었기 때문임

□ 사회문화 의식통합은 90점 만점 중 39.4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하지만 관계통합이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의식통합은 소폭으로 하락됨

- 연도별 사회문화 의식통합의 추이는 2007년 41.0점, 2008년 40.9점, 2009년 39.4점으로 변화함
-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남북한 주민의 상반된 의식태도가 나타남.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 행위들이 남한의 경우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에, 북한은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을 통해 내부 결속과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남한에서 살포된 전단지(빠라)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 결과 남한의 인지수준이 낮아짐

-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질의식이 증가하였지만, 현재의 분단 상태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역으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통일의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임

제5장
남북통합지수의 산출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09년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198.6임. 남북한의 통합의 수준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19.9%가 통합됨
 -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종합지수는 212.2에서 198.6로 13.6 포인트가 감소하였고, 통합율은 21%에서 19.9%로 소폭 낮아짐
 - 법·제도 통합지수는 270점 만점 중 29.8점, 관계적 통합지수는 480점 만점 중 48.3점, 의식 통합지수는 250점 만점 중 120.5점을 기록함
 - 분야별로 보면, 경제 분야의 통합지수는 330점 만점 중 71.1점, 정치 분야의 통합지수는 330점 만점 중 51.1점,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지수는 340점 만점 중 76.4점임

- 2007~2009년 기간 남북 통합률은 2년 연속 낮아지고 있으며, 정치 분야의 통합 감소폭이 가장 큼
 - 3년간의 남북 통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27%→2008년 21%→19.9%로 계속 낮아짐
 - 분야별 통합지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경제 분야의 경우 2007년 80.1→2008년 72.9→2009년 71.1로 소폭 감소하고 있고, 정치 분야의 경우 91.2→55.3→51.1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100→84→76.4로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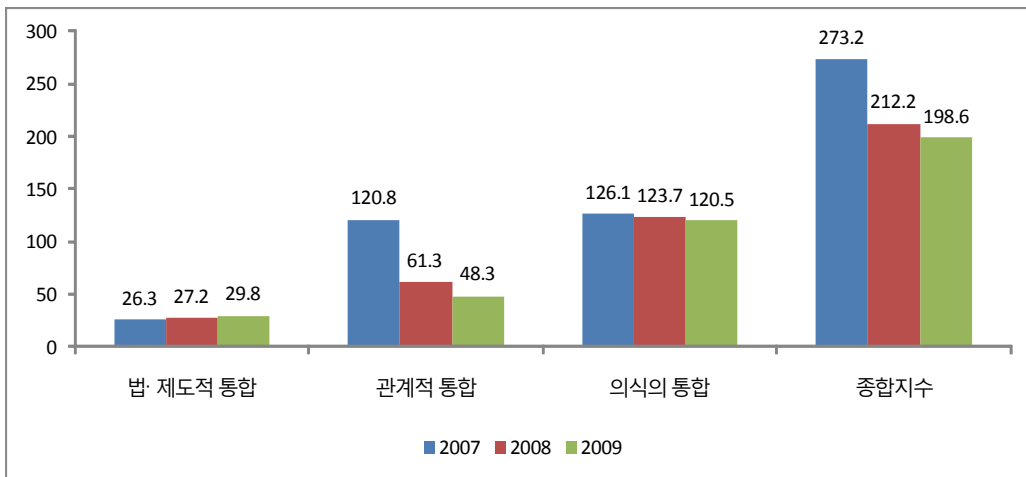
〈표 5-1〉 2009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법·제도적 통합	8.7/90	9.7	6.9/90	7.7	14.2/90	15.8	29.8/270	11.0
관계적 통합	21.1/160	13.2	4.4/160	2.8	22.8/160	14.3	48.3/480	10.1
의식의 통합	41.3/80	51.6	39.8/80	49.8	39.4/90	43.8	120.5/250	48.2
합계	71.1/330	21.5	51.1/330	15.5	76.4/340	22.0	198.6/1000	19.9

□ 2007년~2009년의 남북통합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종합지수는 2007년 273.2점, 2008년 212.2점, 2009년 198.6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함

- 법·제도의 통합수준은 점차 높아진 반면에, 관계적 통합과 의식 통합의 수준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특히, 관계적 통합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연도별 수치를 보면, 법·제도의 통합지수는 2007년 26.3→2008년 27.2→2009년 29.8로 변했고, 관계적 통합지수는 120.8→61.3→48.3으로 변했으며, 의식 통합지수는 126.1→123.7→120.5로 변했음

〈그림 5-1〉 2007~2009 3개년 영역별 합계지수 및 종합지수 비교



□ 남북통합의 수준을 단계별로 평가해보면, 2009년 분야별 제도&관계 통합의 단계는 경제 2단계, 정치 1단계, 사회문화 2단계로 나타나 정치 분야를 제외한 경제와 사회 문화 분야의 통합 단계가 2008년과 대비하여 모두 한 단계씩 하락함

□ 2007~2008년의 3년간 분야별 제도&관계 통합의 단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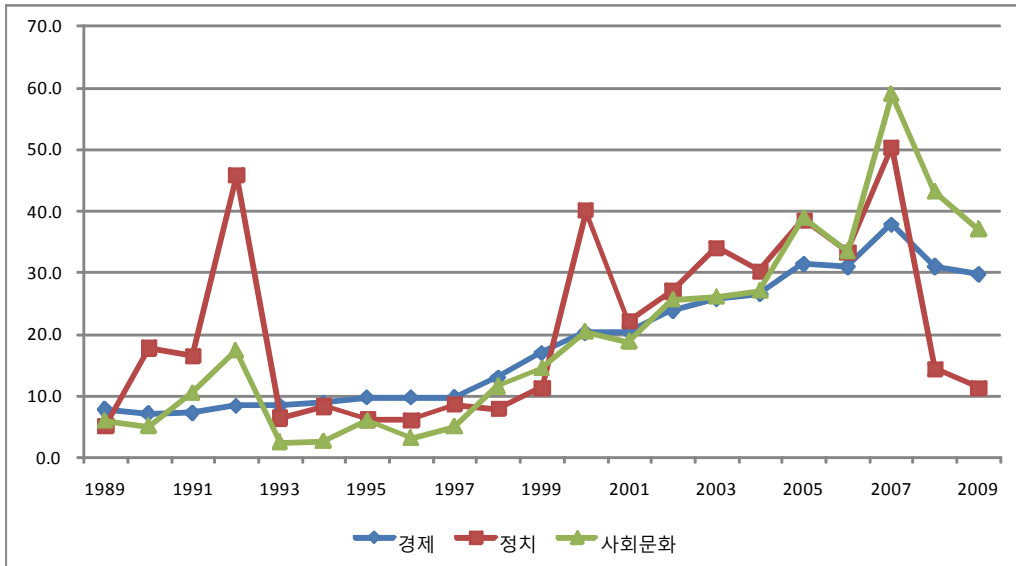
- 경제 분야의 경우, 2007년 3단계→2008년 3단계→2009년 2단계로 변함
- 정치 분야의 경우, 2007년 3단계→2008년 1단계→2009년 1단계로 변함

-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2007년 3단계→2008년 3단계→2009년 2단계로 변함

〈표 5-2〉 남북통합지수의 시계열적 추이 (제도&관계통합)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 (90)	관계 (160)	합계	단계	제도 (90)	관계 (160)	합계	단계	제도 (90)	관계 (160)	합계	단계
1989	1	6.8	7.8	0	1	4.1	5.1	0	1.1	4.8	5.9	0
1990	1	6.2	7.2	0	1	16.8	17.8	1	1.1	4	5.1	0
1991	1	6.3	7.3	0	1	15.5	16.5	1	1.1	9.3	10.4	0
1992	2	6.4	8.4	0	2	43.8	45.8	3	1.3	16	17.3	1
1993	2	6.5	8.5	0	2.5	3.9	6.4	0	1.5	1	2.5	0
1994	2	6.9	8.9	0	2.6	5.7	8.3	0	1.6	1	2.6	0
1995	2	7.8	9.8	0	3.1	3.1	6.2	0	1.9	4	5.9	0
1996	2	7.8	9.8	0	3.2	2.9	6.1	0	2.2	1	3.2	0
1997	2	7.8	9.8	0	3.3	5.3	8.6	1	3.2	1.8	5	0
1998	5	8.0	13.0	1	3.8	4.1	7.9	0	6.9	4.6	11.5	1
1999	5	12.0	17.0	1	4.3	7	11.3	1	7	7.4	14.4	1
2000	5	15.3	20.3	1	4.4	35.7	40.1	3	7.1	13.3	20.4	1
2001	5	15.4	20.4	1	4.5	17.6	22.1	2	7.2	11.6	18.8	1
2002	5.5	18.3	23.8	2	4.6	22.4	27	2	7.2	18.3	25.5	2
2003	5.5	20.2	25.7	2	4.7	29.3	34	2	7.4	18.7	26.1	2
2004	6	20.5	26.5	2	6	24.2	30.2	2	7.5	19.5	27	2
2005	6	25.4	31.4	3	6.1	32.4	38.5	2	8.4	30.4	38.8	2
2006	6.5	24.5	31.0	3	6.2	27.1	33.3	2	9.2	24.3	33.5	2
2007	8.3	29.5	37.8	3	6.3	44	50.3	3	11.7	47.3	59	3
2008	8.3	22.7	31.0	3	6.3	8.1	14.4	1	12.6	30.5	43.1	3
2009	8.7	21.1	29.8	2	6.9	4.4	11.3	1	14.2	22.8	37.0	2

〈그림 5-2〉 남북통합지수의 연도별 추이



〈참고〉

〈표 5-3〉 2007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법·제도적 통합	8.3/90	9.2	6.3/90	7.0	11.7/90	13.0	26.3/270	9.7
관계적 통합	29.5/160	18.4	44.0/160	27.5	46.9/160	29.6	120.8/480	25.2
의식의 통합	42.3/80	55.3	40.9/80	51.1	41.0/90	45.6	126.1/250	50.4
합계	80.1/330	24.3	91.2/330	27.6	100/340	29.4	273.2/1000	27.3

〈표 5-4〉 2008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법·제도적 통합	8.3/90	9.2	6.3/90	7.0	12.6/90	14.0	27.2/270	10.1
관계적 통합	22.7/160	14.2	8.1/160	5.1	30.5/160	19.1	61.3/480	12.8
의식의 통합	41.9/80	52.4	40.9/80	51.1	40.9/90	45.4	123.7/250	49.5
합계	72.9/330	22.1	55.3/330	16.8	84/340	24.7	212.2/1000	21.2